

또 추락사고... 매뉴얼조차 없는 검거작전

경찰 3명 기본적인 퇴로차단도 안한 채 기다리다 사고 초래 수배자 도주 중 추락 의식불명... 잇단 안전사고 예방책 시급

경찰의 단속·검거를 피하려다가 죽거나 중태에 빠지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경찰은 인명사고를 막기 위한 매뉴얼조차 없이 검거작전에 임하는 것으로 드러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체포 및 검거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라'는 조치요령은 있으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해서는 아무런 매뉴얼이 없다 보니 기본적인 퇴로 차단조차 이뤄지지 않고 검거 작전에 투입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검거 대상자가 달아나다가 추락해 중태에 빠지는 등 예방할 수 있는 사고조차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4시38분께 사기 혐의로 수배 조지

가 내려진 김모(58)씨가 광산구 월곡동의 한 건물에서 추락,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이틀째 의식 불명 상태다.

당시 4층 강의실에서 20명 가량의 청중을 상대로 자연치유 관련 강의를 하던 김씨는 수사관 3명이 강의실 주변을 오가자 수상한 김씨를 알아채고 배란다로 나가 도주를 시도했다. 김씨는 4층 배란다로 나가 외벽 통신키블을 잡고 내려가던 중 3층 높이에서 1층으로 떨어졌고, 이를 발견한 경찰이 119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20분 전 이 건물 4층 사무실에 찾아가 김씨가 바로 옆 강의실에서 강의 중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잠복 중이었

다고 설명했다. 검거 대상자가 흉악범이 아닌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수배자임을 감안, 강의를 방해하지 않고 끝내면 체포할 방침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강생이 모두 나온 뒤에도 김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강의실과 배란대를 수색했고, 키블을 잡고 3층 높이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한 김씨를 발견한 것이다.

출동했던 경찰은 사고 당일 정오에 관련 제보를 받았다. 검거 작전이 이뤄지기 전까지 4시간 이상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수배자의 도주 가능성, 예상 도주 경로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출동했던 경찰 3명이 모두 강의가 끝날 때까지 4층 복도에서 기다리고만 있었던 것이다.

검거 장소가 4층인데다 검거 대상자가 15억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저지르고 2년 이상 도피 중인 사실을 감안한다면, 필사적인 도주 시도 끝에 인명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지만, 이에 대한 준비는 없었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엔 추락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진 김씨 사례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 8월 순천에서도 경찰의 도박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40대가 6층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는 등 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경찰 내부적으로 기본적인 매뉴얼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은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나 체포 과정에서 영장 제시, 변호사 선임권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하라는 매뉴얼은 있으나, 체포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은 없는 상태"라면서 "모든 변수를 고려해 매뉴얼을 만들 수 없는 탓에 현장 책임자에게 일임하는 형식이었지만 체포 과정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만큼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 유치원들 교사 월급 못줬다

4월분 누리과정 예산 못받아... 보육대란 현실화

광주지역 유치원들이 4월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끝내 지급받지 못했다.

2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60억원 상당의 4월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유치원 교사들의 임금 체불 사태가 현실화됐다. 누리과정 지원비에 의존해온 영세 유치원들의 운영난도 불가피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1월 임시회 때 3개월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안(176억3900만원 상당)을 편성해 시의회 의결을 거친 뒤 지역 유치원들에게 배정한 바 있다. 하지만 4월분 유치원 예산은 지난달

임시회 때 심의·의결을 거치지 못하면서 제 때 지원이 힘들어졌다.

시교육청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시의회 임시회에서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556억원·9개월분)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시교육청은 26일 시의회와 긴급 회의를 열고 기존 유치원에 지원할 다른 몫의 예산 중 일부를 '전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교육청이 '여소야대' 정국을 활용,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유치원 운영비·교사 임금 체불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김지윤기자 dok2000@

요양급여 165억 쟁건 불법 사무장병원

장성경찰, 운전자 등 4명 적발 검찰 송치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165억여원을 쟁건 운전자 경찰에 붙잡혔다. 이 운전자는 서울에서도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가 적발된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성경찰은 의료기관 개설자적 없음에도 의료인을 고용해 속칭 '법인형 사무장병원'을 불법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요양병원 행정원장 A(54)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의료인을 고용해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산하의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운영하며 2011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65억여원을 부정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 B(53)씨와 투자자 C(54)씨·

D(78)씨 등과 공모해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뒤 임원으로 활동하며 요양급여비와 출원금 등 병원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법인 설립 과정에서 발기인 이사회 승인 절차 등을 거치지 않거나 이사 명의를 도용해 서류를 조작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히 일부 직원을 위장 취업시켜 급여 850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속여 병원자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장성경찰 관계자는 "부정 지급한 요양급여비를 환수 조치토록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유사한 위험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내 의료기관을 상대로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무각사 오색 연등 부처님 오신날(5월 14일)을 앞두고 25일 광주시 서구 무각사 대웅전 앞 뜰에 오색 연등이 설치돼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혁신도시 땅 1년도 안돼 수익원 차익 쟁겼다"

투자 유혹 5억여원 가로챈 40대 붙잡아

광주남부경찰은 25일 혁신도시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유모(4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유씨는 지난해 11월5일께 '나주 혁신도시 주변 부동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A(여·48)씨 등으로부터 2억원을 받아 쟁기는 수법으로 광주와 전남에서 총 4차례에 걸쳐

5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피해자들에게 '혁신도시에 땅을 한 번 사고 팔았다면 1년도 안 돼 수억원의 차익을 쟁겼다'고 꼬드겨 돈을 쟁긴 뒤 잠적하는 등 사기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최근 전주에 은신해 있던 유씨를 붙잡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동구 부구청장 미화원 채용 비리 관여 정황 확인

광주시 감사...묘목 판매 사실로

홍화성 광주시 동구 부구청장이 환경미화원 채용 비리에 관여한 정황이 광주시 감사 결과, 확인됐다. 홍 부구청장이 청장 권한대행 때 외압을 행사해 자신의 묘목을 동구청에 판매한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동구청 환경미화원 채용과정에서 홍 부구청장의 친적이 위장 전입한 사실과 채용과정에서 개입한 정황 및 진술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12대 1의 경쟁률을 보인 환경미화원 채용과정에서 홍 부구청장의 친척은 광주시 거주지만 지원할 수 있는 요건에 충족하기 위해 채용공고(3월14일)가 나

기 6일 전인 3월8일 목포에서 동구 서남동으로 위장 전입했다. 채용공고 직전에 전입한 사실은 홍 부구청장이 채용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친척에게 알려주고 도움을 줬다는 의심을 가능하게 한다.

감사위원회는 "홍 부구청장 혼자 했는지, 다른 직원과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는 차후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 부구청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본인 소유의 묘목을 구청에 판매했다는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홍 부구청장이 식목일 식재 수종을 결정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일부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진단

재정지원 절감대책 마련 요구

시민단체가 광주시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총체적 진단과 재정지원 절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참여자치21은 25일 논평을 내고 "지난해 광주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532억원에 이르고, 2007년부터 본격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모두 3152억원에 이른다"며 "한 해 평균 350억원이 지원되는 광주 버스준공영제는 시민 형세를 먹이는 하마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명경영, 연료비 직불제 시행, 노선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한 운송수입금 증대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88층 쌍둥이 빌딩 사업설명회 기대감 보다 의혹만 확산

○...광주 총장로에 88층 쌍둥이 빌딩을 세우겠다는 업자가 등장해 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었으나 사업에 대한 기대감 보다는 의혹만 확산.

○...25일 광주시 동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총장로 5가의 한 교회에서 진행된 사업설명회에서 업체 측은 총장로 5가 100번지, 수기동 20번지 일대 4만9926㎡의 땅과 건물을 매입해 지상 88층 지하 6

층 규모의 쌍둥이 빌딩을 짓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1조7896억원을 민간유치사업으로 총담할 예정이며 이미 유대계 및 아랍계 그룹과 투자협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1조원짜리 건물 계획치고는 준비된 설명자료나 사업계획이 형편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을 빌미로 사기 행각을 벌이던 측각 수사기관에 고소할 계획"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모델 회사 사정상 급매 합니다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 세미나실 / 객실, 2~4층 - 객실
- 주위에 매매물건 없음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용 6억3천만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협의
- 리모델링 공사비 4억 별도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여수, 대지매매

전남 여주시 서교동 668-7, 8번지 서교동 로타리 우리은행 바로 옆

- 대지 260평 (120평 140평 분할 가능)
- 일반 상업지역 / 6차선 도로 접 / 현, 주차장
- 시세 / 감정가 - 23억원
- 용 12억 5천만원 있음 /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협의
- 병원 / 사무 / 무인텔 / 상가 / 대형마트 등등 적합
- 1층 조립식 건축 후 상가 임대료 1,200만원 예상
- 주인직매 H. 010-8829-6876

무인텔 동업 / 투자 / 인수 하실분!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번지 도곡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객실 52개
- 시세 / 감정가 - 60억
- 동업 / 투자 / 매매 - 협의
- 경매로 11억 2500만원 낙찰 용 10억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명도소송 진행중
- 명도 후 50억원 이상 매매 가능
- 소유자 H. 010-3605-5000

오천경매

- ▶ 비법 배우면서 투자하실분!
- ▶ 특수 물건과 NPL만 전문취급
- ▶ 교육비 1,200만원
- ▶ 예약 상담 필수

대표 최선규 H. 010-3605-5000